

FOCUS

- “집 앞에서 걸어서 10분” ... 도시 텃밭 1,800개 생긴다
- 흥릉, 도시재생기반 바이오·의료 R&D거점으로 재탄생

ZOOM-IN

- 서울시분쟁조정위, 105명 대부업 피해 구제·빚 10억 원 탕감

HOT ISSUE

- IT기업 전용 창업지원·애로상담 원스톱 온-오프라인창구 개설
- 서울시, 11월까지 자치구 순회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진행
- 서울시,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 대토론회 개최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본부 gykim@seoul.go.kr)

| “집 앞에서 걸어서 10분” ... 도시 텃밭 1,800개 생긴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시 텃밭’이 조성되고, 낙엽과 음식물 생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는 자원이 텃밭의 퇴비로 활용된다. 서울 곳곳에 시민 누구나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며,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농업교육도 연중 시행된다.

•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 플랜’ 발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에 이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비전으로 하는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



첫째, 2018년까지 서울시내 유희지와 폐부지 420ha를 확보하여 생활 속 10분 내에 찾을 수 있는 틈새·옥상·학교농장 등 ‘도시 텃밭’ 1,800개소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상자(주머니)텃밭 13만 세트도 시민에게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파트·공공시설 등에 옥상농원·수직농장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은평구 혁신과 크에는 시민들의 도시농업체험장인 ‘도시농업존’을 조성한다. 또한 텃밭관리자 등 도시농업을 활용한 일자리도 연간 700명 수준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가정에서 나오는 조리 전 음식물 생 쓰레기의 5%를 도시농업 퇴비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15년 1일 20톤 → ’18년 1일 110톤)

넷째, 2018년까지 ‘도시농업박람회’를 세계적인 행사로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자연이 순환하고 생태계가 복원되기 위하여 도시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공동체 도시, 생명의 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홍릉, 도시재생기반 바이오·의료 R&D거점으로 재탄생

1960~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초기지이자 한국과학기술의 요람이었던 홍릉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바이오·의료 R&D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 홍릉, 연구기관과 대학 등 바이오·의료 R&D거점의 핵심역량 보유

먼저 서울시가 매입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까지 중개연구기술거래 등의 R&D지원, 특허·벤처캐피탈·법률·회계 등의 경영지원, IR교육·기술거래·교육 등의 전문인력 양성 목적



을 지닌 개방과 혁신의 오픈형 ‘바이오의료 R&D 앵커’로 탈바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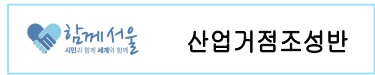
둘째, 2017년부터 회기로를 따라 ‘바이오의료 R&D 스트리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해 관련 우수기업 및 해외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한다.

셋째, 기초연구기술을 갖춘 KIST-KAIST-고려대-경희대병원 등과 연계해 홍릉을 장기적으로 산업·교육-

연구·기술·인력이 연계된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일부 공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홍릉 숲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배후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등을 통해 홍릉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구단지로 조성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홍릉 인근에는 2개의 상급종합병원, 생물학·의공학과 같은 연구가 특화된 KIST, KAIST 등의 기초연구기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한국기술벤처재단 등이 입지해 있어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 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홍릉단지의 재생을 통해 동북권 균형발전의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서울형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분쟁조정위, 105명 대부업 피해 구제·빚 10억 원 탕감

서울시가 2013년 4월 설치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4월 1일 현재 105명(352건)의 시민이 진 빚 10억 3백만 원을 탕감해줬다고 밝혔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분쟁조정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분야 전문가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설 첫해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800만 원의 부채를 덜어줬으며, 지난해에는 접수받은 시민 98명(343건) 중 85명(29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채무 구제액은 8억 3,500만 원이었으며 처리한 294건을 살펴보면 사전합의가 172건, 취하가 39건, 분조위 회부 조정수락이 49건 등이었으며 약 88%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올해 접수 건들은 조정을 진행하는 중이다.

• 분쟁조정 대다수가 연대보증 대출관련, 자필서명 안한 경우가 가장 많아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 대출관련 피해가 대다수이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은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부업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나 경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를 보내면 된다.

| IT기업 전용 창업지원·애로상담 원스톱 온-오프라인창구 개설

경기침체로 인한 IT업계 부진과 이로 인한 창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IT기업 예비창업자와 신생 IT기업 CEO를 위한 원스톱 상담지원창구 'IT창업상담코너'가 문을 열었다.

• 창업공간과 법률·교육·기술사업화 지원 등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

상담분야는 서울시 소유의 창업센터 공간지원이나 창업에 따른 법률서비스, 교육, 기술사업화 지원 등 IT창업 및 기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곳에서는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 인력의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메뉴로 개설된 <온라인상담코너>에 IT창업 관련애로 사항 및 지원 요청 사항 등을 게시하면 3일 이내 담당자의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IT종합센터의 <IT창업상담 및 지원창구>를 찾아가면 된다. 이곳에서도 실질적인 IT기업 창업상담부터 관련 애로사항 해결방법까지 안내해준다.

오프라인 1차 상담 후 서울시의 지원책 및 관련산업 활성화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엔 서울시 디지털산업과(서울시청 무교별관)를 방문하면 서울시 담당자와의 2차 심층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창업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IT산업 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서울시, 11월까지 자치구 순회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진행

2015 "희망의 내일, 내일 찾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일정	공동개최구	개최장소
4.10(금)	서대문, 은평	서대문구청 대강당
4.22(수)	성북, 강북	성북구청 바림마당
5.1(금)~ 2(토)	대학생 유니브엑스포	고려대 광장
5.15(금)	양천	양천 해누리타운
5.28(목)	관악, 서초, 영등포	관악구청 광장
6.9(화)	동작	동작구청 대강당
6.19(금)	중구, 중로, 용산	청계광장

시간: 14:00-17:00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노동복지재단, 서울여성진흥원, 서울장애인복지재단, 서울노년복지재단, 서울청소년복지지원회, 서울장애인복지재단, 서울노년복지재단, 서울청소년복지지원회, 서울장애인복지재단, 서울노년복지재단, 서울청소년복지지원회

http://www.seouljob.or.kr

서울시가 4월 10일(금) 서대문구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서울지역 자치구를 돌며 총 11회에 걸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희망의 내일찾기’를 주제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구가 주관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인근 2~3개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지역 내 다수 분포한 정보통신, 건설, 패션, 의료, 교육 등 주요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기업에 적합한 청장년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부터 진행한 이 박람회는 현재까지 3,750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줌으로써 지역 일자리 활성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 800여명의 시민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취업지원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등 부대행사, 특성화고 취업특강 등 실시

취업박람회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채용계획이 있는 30여 개의 기업이 현장에서 구직자 면접 및 상담을 실시하며, ‘취업지원관’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특강과 커리어 컨설팅, 이미지메이킹, 이력서 무료 사진촬영 등을 진행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자치구 일자리센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기관별 주요 일자리 사업 홍보와 취업 알선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사전매칭시스템을 활성화해 구직자가 사전매칭을 신청하면 취업 컨설턴트가 현장 참여기업 중 적합한 곳을 추천해, 현장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후관리로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 대토론회 개최

임대료 폭등과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상안전문가관계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약 70명이 한자리에 모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내의 상가임대차 제도 비교분석해 임차상인권리 보호방안 마련, 제도개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의 상가임대차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임차상인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상가임차인의 현실,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교수가 미국·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김교수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임차인의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약기간 보장은 물론 계약해지 시의 퇴거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법제연구원 정명운 박사가 '해외사례와 한국 제도의 비교 검토'를 주제로 외국에서 영업권으로 보장되는 권리금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김영주 변호사(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자문위원)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제도개선의 노력,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박일환 수석전문위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임법 개정 논의 현황'을,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임영희 사무국장은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조사관이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수렴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정립에 활용하고,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지원과